社 說

눈물과 함께하는 경희발전

— 창간 38주년을 맞이하며

경희학원의 역사를 소중히 기록해오고 정의와 진실의 고귀한 생명을 이어온 대학주보가 또다시 창간을 맞이 하게 되었다.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하에서 대학언론, 특하나 대학신문은 정보기관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어왔다고 표현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84년 학원 자율화조치에 이어 대학신문도 자기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 왔다. 87년 6월 항쟁을 거쳐면서 좌우편향을 걷기고 했던 대학신문은 89년 '매체혁신'이라는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노정되어 왔던 좌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2년여의 시도끝에 매체혁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언론의 생산과 소유의 주인은 바로 대중이고 언론은 대중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대학신문의 궁극적 지향인 '대중신문'의 상을 명확히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신문과 대학신문일꾼들의 줄기찬 노력은 한때는 정부로 부터 편집장 및 기자, 필자 구속, 수배라는 직접적인 탄압을 받아오기도 하였으며 때론 학교측으로부터 배포 및 발행금지, 기사검열 및 삭제등 음으로 양으로 갖은 간접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현재 동아대학교 신문사, 서경대신문사, 한성대 신문사, 외대학보사등 크고작은 신문사의 분규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우리는 학원의 3주체인 교수, 학생, 교직원들을 학원의 주인된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위한 대학신문의 노력이 이처럼 정부와 학교측으로 부터 탄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깊고 넓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학신문에 대한 학교당국의 제작중지 및 사전검열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언론탄압은 해방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부패될대로 부패한 대학, 특히 비리사학재단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아대를 비롯한 한성대, 외대에서는 현재 학원자주화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외 대학의 싸움과정에서 들어날 수 밖에 없는 비리사학재단및 학교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건이 기사화 되는것에 대하여 학교측은 인정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학내의 구성원 모두에게 액면 그대로 알려지게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아니보다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학원의 온갖 비리들이 공개되어 알려졌을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학원 구성원들의 반발이다.

우리는 현재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신문에 대한 크고작은 탄압을 접하면서 그동안 해방후 40여년동안 숨겨져왔고 썩어왔던 한국 대학의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시유책은 무엇이며 그속에서 대학신론의 사명은 무엇인가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우리 경희대학의 어둠이 타 학교에 비해 언론매체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안량한 위안을 삼으려는 경희가족이 있다면 당장 보따리를 싸야 마땅하다. 또한 경희대학 역시 눈물을 머금어 가면서도 줄여야 할 숙제가 산재해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 대학주보는 창간 38주년을 맞이하여 대학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데 경희 2만여 가족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이 새로운 경희의 역사를 창조하는 왕로임을 다시 새기는 바이다.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서울총학 회칙 개정 연기를 보고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는 중요한 안건이 토의·의결될 예정이었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본보가 1022호에 보도한 대로 총학생회 회칙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지난 84년 이후 수차례 회칙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회칙개정은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진행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들의 참석률만 봐도 그러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논의부족외에 이번 개정회칙 통과의 점차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의 회칙에 따르면 회칙개정은 '학생총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대의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들어 현 회칙에는 의결기구로 명시되지 않은 전학대회를 통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현재의 회칙에 대한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총학생회의 입장도 이해되는 면이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회칙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정원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존회칙을 무시하고 회칙을 개정한다면 차후 '개정회칙'의 정당성에 커다란 허점이 될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회칙은 이후 또다른 편법으로 개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정말로 회칙을 개정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총학생회는 '대의원대회'소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전학대회'구성원과 현 회칙이 규정한 '대의원'의 구성원은 많은 부분이 겹쳐 있다. 그러므로, 현 전학대회를 기존의 대의원대회로 해체·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이런 방법 또한 어렵다면 '학생총회'를 통한 개정밖엔 없다. 좀더 긴 시간의 논의와 총학생회의 회칙개정에 대한 열의가 더욱 높아진다면 '학생총회'도 가능하리라 본다. 무언하고 싶은 것은 H대와 K대가 이번 하기 '기성회비 철회 투쟁'시 학부모의 위임장을 받아 성사시켰던 점을 상기하고 싶다.

학생총회시 점석이 어려운 학생의 '위임장'을 받아 표결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 매체비평

'책의 해'의도도 벗어나는 수서(收書)운동

책도 하나의 상품이다. 책을 만드는 출판사도 책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 출판사도 이윤이 있어야 재생산—책을 출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너무나 간단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올해는 모두 알다시피 '책의 해'이다. 책의 해 캐치프레이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책의 정보를 함유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곡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른바 개인이나 단체, 도서관 등에서 벌이고있는 수서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경우인데 "책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각 출판사의 책을 공짜로 얻으려는 '운동아닌 운동'이 출판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다. 출판사로부터 얻으려는 책은 '이미 재고처리된'책들인데 어느 출판사가 자신의 '실패작'을 선뜻 내주면서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한 발 양보해서 '실패작'을 기증받았다 치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책을 읽을 독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분명 기증받은 도서를 읽는 독자들 대부분 그 책이 이미 관심밖에 있는 철 지난 책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책을 상식적으로 대한다면 마치 모든 책이 그런 것인 양 여길 것이고, 독자들은 점차 책에서점차 멀어지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수서운동을 벌이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식도 문제다. 단지 빈 서고만 채우려는 것은 전시행정의 한 유형임에 다름 아니다.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도서를 미끼하는 단체도 많은데, 조금도 독자를 생각하는 마음 없이 눈 앞의 성과만 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니다.

자선단체도 아닌 출판사가 현재 시중에서 잘 팔리고 있는 도서를 무일푼으로 기증할수도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책을 사보는 이와 공짜로 얻는 이는 같은 독서인이면서도 공평하지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꼴이 되고 만다.

물론 수서운동을 벌이는 개인이나 단체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문화체육부의 올해 도서관 정책을 보면 장서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광주시내 5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한 곳만이 법정장서량인 9만권을 넘기고, 나머지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예만 봐도 알 수 있다. 경기도 또한 '범도민 도서 10만권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10만권 구입운동'이 아니라 수서운동을 펼치겠다는 발이다.

모 일간지에서도 책의 해라는 이름을 빌어 수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대 언론사로서 자신들의 돈으로 해야 할 일을 독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 또한 옳은 일이라 볼 수 없다.

책은 어느 누구에게서 받아도 좋은 선물임에는 틀림없지만, 무분별한 수서운동은 책의 해를 오도한 소치임에 틀림없다. 책이 팔리지 않는 책의 해에 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또한 정부의 도서관정책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성 수

〈출판저널 기자〉

가오리회는 가오리회라고 밝혀라

사론

— 광주진상규명과 김영삼정권

먹어본 사람은 안다. 그 쫄깃쫄깃하면서도 시큼한, 혀에 착착 감기는 육질의 촉감이 주는 기막힌 맛을. 홍어회의 맛을. 그러나 저쪽로 침을 흘리게 하는 미각의 향연은 어디까지나 진짜 홍어회에 국한된 경우이다. 사실 일반인들이 먹는 홍어회 가운데 진짜 홍어회는 드물다. 진짜 홍어회는 요즘 신문지상에 단골 손님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들의 식탁에나 오를까, 일반 서민들의 소주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추렴으로 겉은 천원짜리 지폐 몇장으로 안주 메뉴판을 힐끔힐끔 곁눈질하면서 적당히 취해보려고 노력하는 빨단 회사원들의 '항연'에는 홍어회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동정한 것이 있다. 말뿐인 홍어회 가오리회이다. 가오리는 그 맛의 효과나 혀에 와닿는 촉감에 있어서는 홍어와 버금가면서도 단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홍어회의 대용품이 되기에 족했다. 고달픈 하루 일과를 마친 술꾼들을 향해 통통한 아줌마가 고함을 질러대는, 대한민국 골목길 어귀에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는 주점에도 홍어회는 있다. 사람은 "아줌마! 여기 홍어회 한 점시"를 신명나게 외친다. 그러나 그들은 안다. 그것이 홍어회가 아니라 실상은 가오리회라는 것을. 주점의 주모도 안다. 사람들이 가오리인지 알면서도 홍어로 알고 먹는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비극이 있다. 홍어회 안주를 시켜먹는 술자리는 서로가 알면서도 속는, 굳이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총체적 마취의 세계이다. 그리고 이 마취의 가치관은 3공화국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다. 이 마취증세는 5공과 6공을 거치면서 더욱 심각한 집단적 병리현상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해 말하랬더니 웬 시답잖은 홍어회 타령인가. 그러나 필자는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하는 회제 아닌 화제를 들을 때마다 홍어회를 떠올리게 된다. 발포 명령자를 찾지 않고, 역사를 온당한 역사로서 자리매김하지 않는 것이나, 가오리회를 홍어회로 가장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

사실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종합하고, 그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특별수사'를 전행하면 될 일이다. 사람들의 총체적 마취를 깨우고, 진짜 홍어회를 내놓으면 그 뿐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가오리회이었노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내놓아라.

사람들은 안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바로 13년전의 광주에서 시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도록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발포 명령자는 다름 아니라,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력찬탈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뒤집어썼던 내란음모죄를 거꾸로 적용당할 운명을 가져야 하는 바로 그들이다. 바로 그들이 아니라면, 권력찬탈의 목격이 아니었다면 무엇 하려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또 다시 80년 광주의 봄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치권을 긴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명예회복을 다짐하는 대신,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자고 했다. 그러니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쑈'를 다시 보게되는 일은 없게 되었다.

5·18은 5·18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그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것에 또 다른 바극이 있다. 다시 말해 5·18을 알기 위해서는 5·17을 조사해야 하고, 5·17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12·12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치 굴비 두름처럼 하나만 뽑아내면 줄줄이 엮여져 나와야 하기 때문에 5·18의 실체에 도달하는 길은 '머나먼 다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현 정권에게서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은 애당초 섣부른 기대이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5공의 후예, 민정당의 후예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자당에게,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도록 요구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

발포진압은 권력찬탈목적, 삼척동자도 알아

역사적 걸림돌 제거부터 진상규명은 시작

(고) (황) (만) (평)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했다. 새 정부가 '될성부른 나무'가 되고 싶으면 12·12사태라는 떡잎부터 그 실체를 벗기고, 12·12사태라는 어정쩡한 이름 대신에,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쉴표한'규정 대신에 12·12군사 쿠데타라고 이름을 붙여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정치적 해결은 그 다음의 일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12·12의 거죽을 벗기지 않고서 5·18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가오리회를 홍어회로 스스로 속이면서 먹는 일이다. 우리 이제부터 가오리회와 홍어회는 구별을 하고 살자.

조 용 준

〈시사저널 정치부 기자〉

21세기를 여는 현대의 첨단기술 — 그 주역을 찾아서 [현대정공편]

21세기, 現代의 '꿈의 열차'가 달린다

— 현대자기부상열차 개발 성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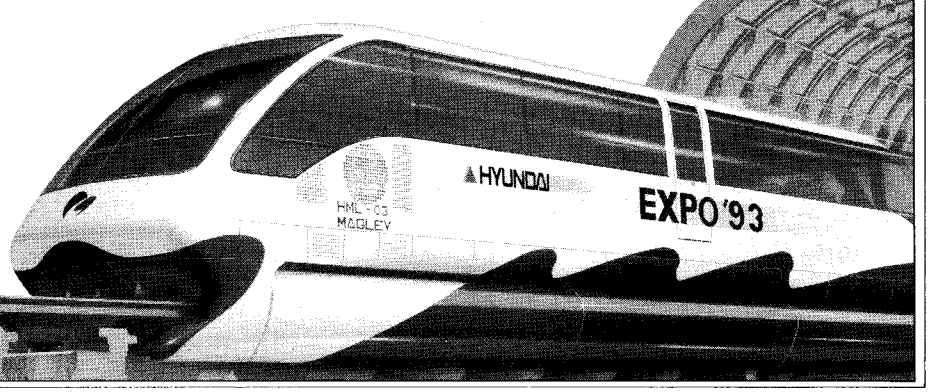
공해는 물론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는 21세기 교통의 주역, 자기부상열차 개발—
"어려울 것 없다. 일단 레일 위에 열차를 띄워보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자신감이 있었기에 우리는 과감히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원리와 자료만으로 시작한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은 부상과 추진은 물론 정위치 제동, 차체 경량화 등 어느 한 분야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고사까지 지낸 적도 있었으니까요.

8년여의 각고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내최초로 곡선운행까지 가능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에 성공했습니다.
'93 대전 EXPO에서 관람객이 직접 탑승할 수 있게 된 최고시속 150km의 현대 자기부상열차—

순수 우리 기술로 독일,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4번째 실용화를 이룬 지금, 금세기 내에 시속 400km 세계 제일의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각오는 더욱 뜨겁습니다.

21세기초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만든 '꿈의 특급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



現代